【현안리포트 05-045】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부산 APEC 2005

2005. 11. 30

통상전략팀

<목 차>

I. APEC 2005 개요 ····· 1
1. APEC이란? ····· 1
2. APEC 2005 ····· 4

II. APEC 2005 정상회담 합의 결과 : 정부간 입장 ····· 5
1. 개관 ····· 5
2. APEC 2005 정상회의의 주요성과 ····· 5
3. 양자간 회담 결과 ····· 10
가. 對중국 경제협력 ····· 10
나. 對러시아 경제협력 ····· 13
다. 對미국 양자 논의 결과 ····· 15
라. 對캐나다 양자 논의 결과 ····· 15
마. 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 16
바. 기타 경제협력 성과 ····· 17

III. 기타 주요행사의 결과 : 민간 부문의 측면 ····· 17
1. APEC 투자환경설명회 ····· 17
2.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AC) ····· 21
3. CEO 서밋(CEO Summit) ····· 23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25

【별첨】對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배경과 효과

【APEC 2005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성과 요약】

구분	내용	의미 및 영향
APEC 21개 회원국 합의	○ **'부산로드맵' 채택** -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 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규정한 보고르 목표 이행 의지 재확인(선구자적 접근 재확인) - 국내규제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자유화를 위한 국내조치도 보고르 목표에 포함 - FTA관련 무역원활화 모델조치 개발(2008년까지)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2010년까지 무역거래 비용 5% 감축 등의 '부산 비지니스 아젠다' 포함 ○ **DDA 특별 성명 채택** - 2010년까지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등 DDA 농산물 분야 협상 타결 촉구 -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대폭 자유화를 위해 '스위스공식' 적용 - 서비스 부문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노력 - WTO 규범 명료화 및 개선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정립하기로 합의	- 교착상태인 DDA 협상 진전의 돌파구 마련 -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 전망 밝아짐 - 비농산물 관련 DDA 협상의 진전 시 한국의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단, 수산업 보호에 취약) -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부각 - 단, 공산품에서는 선진국 입장을 지지하며 농산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모순 유지
한-미	- 미국, 한국의 쌀 협상안 국회비준 촉구 -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및 스크린쿼터 축소를 직간접 요청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임박 - 한국, 국내 이견 조율에 대한 부담이 커짐
한-중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 체결(2012년까지 2000억달러의 교역 목표 설정 등) - 한-중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합의 -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구축 합의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	- 한-중 통상협력 강화 -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갈등 해소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지방정부도 참여, 현지투자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지원 강화
한-아세안 (양자 회담 및 한-아세안 통상장관회담)	-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타결의 필요성 공감 (한-아세안 통상장관회담)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005. 12월 ASEAN+3 회의에서 아세안과의 FTA 상품분야 타결을 위한 지원 약속 및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문제 이해 확대	- 한국이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의 중심축이 될 기반(한-아세안 FTA) 마련 -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향상의 기회 마련
한-러시아	- '한-러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 - 러시아, 추가 배정 명태쿼터에 대한 조업허가장 조기발급 합의 - 러시아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 공식 부여 - '한-러 가스협력협정' 연내 체결 요청 등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시베리아-극동지역 발전에 큰 관심 표명 - 러시아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관련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	- 한-러 통상협력 강화 - 명태 조업의 걸림돌 해소
한-일	-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 없음	- 한-일 FTA 장기 교착 상태

I. APEC 2005 개요

1. APEC이란?

□ 개념 및 운영

○ APEC[1](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로서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추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For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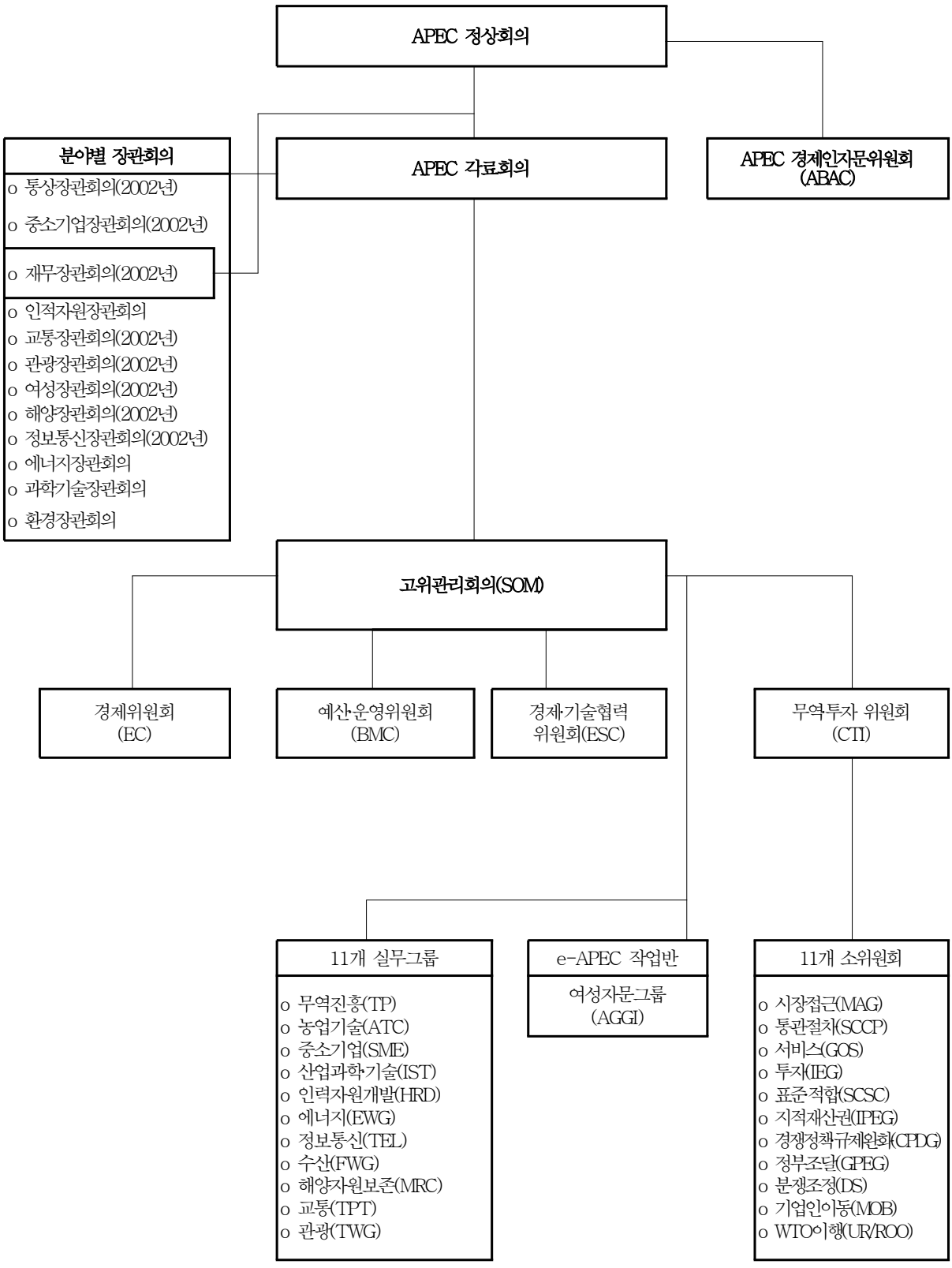
- 경제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5.8%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며, 세계 총면적의 46.8%, 세계 총인구의 44.8%, 세계 총명목 GDP(약36조 4천억 달러)의 57%를 차지하고 있음(자료 : World Bank)

【APEC과 한국】

☞ 1989년 APEC 출범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의 하나로 참가함
☞ 한국에게 있어 최대의 무역·투자 파트너
-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4%, 외국의 대한국 투자액의 63.3%(2004년 6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총수출의 72 %, 총수입의 68.6%, 한국의 총 해외투자 총액 중 69.5%를 차지하는 지역협력체임

1) 회원국(총 21개국) :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베트남(이상 아시아 13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이상 미주 5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이상 오세아니아 3개국)

□ 조직 및 구조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o 통상장관회의(2002년)
o 중소기업장관회의(2002년)
o 재무장관회의(2002년)
o 인적자원장관회의
o 교통장관회의(2002년)
o 관광장관회의(2002년)
o 여성장관회의(2002년)
o 해양장관회의(2002년)
o 정보통신장관회의(2002년)
o 에너지장관회의
o 과학기술장관회의
o 환경장관회의
APEC 각료회의
APEC 경제인자문위원회
(ABAC)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회
(BMC)
경제·기술협력
위원회(ESC)
무역투자 위원회
(CTI)
11개 실무그룹
o 무역진흥(TP)
o 농업기술(ATC)
o 중소기업(SME)
o 산업과학·기술(IST)
o 인력자원개발(HRD)
o 에너지(EWG)
o 정보통신(TEL)
o 수산(FWG)
o 해양자원보존(MRC)
o 교통(TPT)
o 관광(TWG)
e-APEC 작업반
여성자문그룹
(AGGI)
11개 소위원회
o 시장접근(MAG)
o 통관절차(SCCP)
o 서비스(GOS)
o 투자(IEG)
o 표준·적합(SCSC)
o 지적재산권(IPEG)
o 경쟁정책·규제완화(CPDG)
o 정부조달(GPEG)
o 분쟁조정(DS)
o 기업인이동(MOB)
o WTO이행(UR/ROO)

□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국가 (지역공동체)	전략과 의도
미국	- 궁극적으로 APEC 자유무역경제공동체로 발전 - 아태지역 주도권 확보 노력
일본	-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와 부합 - 미국으로부터의 금융 및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우려,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는 소극적 입장
중국	- 국내 경제개혁과 세계경제로의 진출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중요한 장 - 대만문제의 국제적지지 확보 노력 -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해 APEC 개도국들과 함께 대응하려는 의도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지역 경제블록으로의 발전에는 부정적
아세안	- 무역과 투자의 대부분이 APEC 국가를 상대로 함 - APEC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증대의 우려는 여전히 갖고 있음 -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이전에 주력 -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자유화에는 다소 부정적
한국	- 국제적 협상력과 발언권 강화의 장 - 다자간 협의체로서 한반도 평화에의 기여 - 다자간 무역협상의 확대를 위한 수단

□ APEC 회의의 성격

○ 구속력 없는 선언에 불과, 이행여부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바 구체적인 이행은 미지수임

-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추어 볼 때,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자간 자유화를 선도하는 등 세계 무역투자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2. APEC 2005

□ 일시 및 장소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5. 11.14~19일, 부산

□ 회의 및 행사 일정

개최 시기	회의명
11.18~19	정상회의(1,2차)
11.12~13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11.15~16	합동각료회의
11.17~19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11.14~18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등
11.14~17	투자환경 설명회 등(산자부)
11.15~21	IT 전시회(정통부)

□ 회의 의제 및 프로세스

○ **의제 :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

○ **회의 프로세스**

- 정상회담 전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과 합동각료회의를 통해 참가국간 실질적인 합의 → 합의된 내용을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승인하고 정상선언문 발표

II. APEC 2005 정상회담 합의 결과[2] : 정부간 입장

1. 개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골자로 함

○ 이번 부산 APEC 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로드맵**'을 통해 동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WTO DDA 협상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등,

○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자유화 의지를 재확인**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
☞ 1992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APEC내 OECD 국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7개 회원국과 중진국인 칠레를 포함하여 총 8개의 국가가 201년을 목표로 이행을 추진중
→ **한국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자유화 추진 중**

2. APEC 정상회의의 주요성과

□ **『보고르 목표』 달성여부 중간점검**

2) 이하의 내용은 APEC 2005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제공 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KOTRA가 정리하였음.

○ APEC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를 향해 중요한 진전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들을 담은 '부산로드맵'을 채택

【APEC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

☞ 회원국 평균 관세율 인하 : 16.9%(89년) → 5.5%(2004년)
☞ 회원국 평균 성장률 : 46%(89~2003년), 非APEC 회원국(36%)

□ **『부산 로드맵』의 주요내용**

○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감하고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DDA 협상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키기로 함

- 또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함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별 행동계획(IAP)을 강화**하기로 함

- **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개국씩 무역 자유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함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유화의 범위를 국경조치(예: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국내조치(예: 국내규제,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보호)도 포함하기로 함**

- **보고르 목표에 대해 동태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취지임

○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까지 회원국들이 APEC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FTA 모델을 개발하기로 합의**

- 높은 수준의 FTA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를 개발**해 RTAs/FTAs 협상에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하기로 함

○ 무역원활화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을 반영한 '**부산 비즈니스 아젠다**'가 부산로드맵에 포함되어 향후 **APEC내 신규 작업의 추진을 예고**함

- 2010년까지 무역거래 비용 5% 감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 부패 연루자 도피처 제공 금지
- 포괄적인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등

○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선언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중요성 강조**

-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 방지,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및 인터넷상 위조 상품 판매방지에 관한 각각의 모델 가이드라인 등을 승인

- 2006년에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지적재산

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 **전략적 능력 배양의 추구**

- 보다 집중적인 **경제기술 협력사업(ECOTECH) 집행**을 위해 능력배양을 위한 추가 재원 물색 및 민관협력 강화

○ **선구자적(Pathfinder) 접근[3] 지속 추진**

-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1년 상해 APEC 회의 시 제시된 '선구자적 접근방법'을 추가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계속 인정하기로 합의

□ **『WTO DDA 협상 특별성명』 채택**

○ **2005년 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2006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감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접근을 개선한다는 궁극적 목표 하에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를 철폐키로 합의**

-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WTO DDA 농산물 분야 협상의 타

3) 2001년 상해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상해합의(Shanghai Accord)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채택된 것이 선구자적 접근방법(Pathfinder Approach)임
- APEC 회원국 중에서 자유화를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수준 및 범위의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를 후속적으로 따라오도록 허용하는 유연성 있는 자유화 방식을 말함

결이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의 협상 장애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 선결과제로 인식하기로 함

- 그러나, DDA 협상에서 강력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 **EU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첨예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임

* 2004년말 Modality(관세인하 폭 등 자유화 세부규칙)에 합의하고 나라별 절차를 거쳐 2006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제5차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 **비농산물 분야(공산품 및 임·수산물)**에서의 **고율의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의 **과감한 자유화 달성**하기로 합의

-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의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을 적용키로 함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

☞ 고관세를 대폭 인하하기 위해 GATT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도쿄라운드(1073~79)에서 스위스가 제안
→ T=t*a/(t+a). (T: 공식적용 후 세율, t: 공식 적용전 세율. a: 관세율 상한)
☞ 국가별 평균관세율과 상관없이 품목별로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 현재의 관세율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일정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방식
☞ 공산품의 경우 수출국인 선진국에 유리, 수입국인 개도국에 불리
☞ 한국의 입장 : 개도국 공산품 관세율이 지금보다 1/2만 낮아져도 한국의 수출이 10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스위스 공식 적극 지지

- 감축 조정계수(coefficients)를 과감한(ambitious) 수준으로 한다는데 합의
* 평균 관세율이 낮더라도 특정 품목의 관세는 대폭 낮춰야 함

- 스위스 공식이 적용되면 **최고 40~50%에 달하는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율이 절반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하기 위한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이 협상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을 정립**하기로 함

○ **DDA 모든 협상에서 개발(Development) 측면을 반영해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함**

-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특히,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함**

3. 양자간 회담 결과[4)]

가. 對중국 경제협력

□ 개요

○ 한-중 정상회담 (11.16 오후, 청와대)

4) 양자 회담의 내용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공동 "제 13차 APEC 경제부문 주요성과(2005. 11. 20)" 자료, 내외신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정리 및 보완하였음

○ 한-중 통상장관회담 (11.15,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1.18, 부산 그랜드 호텔)

□ 주요 합의 사항

○ 對중국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인정

【對중국 MES 지위 인정의 의의 및 영향】

☞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 MES)**
-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덤핑 판정시 국내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여부 심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는 결과 초래

☞ 중국 제품이 덤핑판정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덤핑판정이 나더라도 덤핑률(=정상가격-수출가격)이 낮아져 제재조치의 수준 약해짐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당초보다 18.7%~27.3% 인하되는 효과 예상(산자부)**
- **반덤핑 조치의 대상 품목의 수입도 2.9%~6.8% 증가할 전망**

☞ **한국에 대한 당장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
- 실제 한국정부는 이미 1999년부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에서 시장전환국가로 인정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상당수는 이미 개별적으로 MES지위 부여받아 옴
- 1999년 이후 16개 중국 제품 중 제3국 가격과 비교해 덤핑판정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

☞ **중국산 제품의 덤핑행위 등 국내 시장교란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 필요**할 것임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 체결**

- 2012년(수교 20돌) 교역 2천억 달러 달성, 중국에 시장경제지위의 부여, 무역마찰 사전예방, 양방향 투자협력 강화 등 포함

* 2005년까지 한-중 교역액(전망) : 1000억 달러

○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 불공정 무역행위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중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 조기 개최** 합의

- 금년 7월부터 부각되어 온 중국산 식품위생안전 문제가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효과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투자-무역을 포괄하는 한중 양국의 최고급 협의체로 격상키로 합의

- 양국의 기업들에게 법제도, 정책 및 시장동향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한-중투자협력위 산하에 **한·중문 공용의 무역-투자정보망 구축 추진**

- 향후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현지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및 지원하기로 합의

○ 중국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계획 참여와 관련하여 투자프로젝트 중심의 투자환경설명회 및 연구회를 정례화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

- 이에 대해 유망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설명회 개최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해상운수협력 장관급 회의 정례 개최 합의 : 물류분야 협력강화

□ **향후 계획**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산하에 실무협의기구 구성**

- MES 인정과 관련, 3개월 내 관련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실시(산자부)

○ 검사검역 고위급 협력체 제1차 회의 내년초 개최 추진

○ 제13차 한-중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상의 **17개 협력사업 구체 이행방안 협의**(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 북경)

나. 對러시아 경제협력

□ **개요**

○ 한-러 정상회담 (11.19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한-러 통상장관회담 (11.16, 부산 BEXCO)
○ 한-러 산업자원장관 면담 (11.19, 부산 롯데호텔)

□ **주요 합의 사항**

○ **'한-러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 체결**

- 동 Action Plan은 2004. 11월 한-러 정상회의시 공동선언 중

경제통상분야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정부간 경제통상분야 협력에 관한 정치적 성격의 합의임 → 한-러 양국의 경제동반자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

○ **추가 배정 명태 쿼터에 대한 조업허가장 신속발급**

-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 조업허가장을 신속히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러시아측은 즉각 해결을 약속

* 양자 통상장관회담 개최 다음날에 조업허가장 바로 발급

○ 러시아 측이 요청한 **시장경제지위(MES)를 공식 부여**

- 2005. 11.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對러시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의결 → 한국은 미국, EU, 캐나다 등에 이어 **18번째**로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 인정

○ 2004년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한-러 가스협력협정**의 일부 미합의 쟁점에 대해 협의를 갖고, **연내 협정체결을 요청**

-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사하공화국 엘가 유연탄개발사업 참여 등에 대해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러시아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향후 계획**

○ Action Plan에 규정된 **'교역체제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산-관-학으로 구성)**를 러시아의 WTO 가입직후 실시

다. 對미국 양자 논의 결과

□ 주요 논의 사항

○ 제6차 홍콩 WTO 각료회의의 성공과 WTO 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한국이 비자면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하는데 공동 노력

* 그동안 한국의 비자거부율이 3.2%로 미국의 주요 면제요건인 3%를 웃돌아 성사되지 못해왔음

○ 미국은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였으며 **미국산 쇠고시 수입재개 문제를 거듭 촉구**함

-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증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하지 못할 이유 없다는 입장을 밝힘

라. 對캐나다 양자 논의 결과

□ 주요 논의 사항

○ **한-캐나다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캐나다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희망**하였으

며, 한국은 이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는 순수한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입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원론적으로 답변

○ 한국은 캐나다와의 에너지 자원협력 협약의 연장을 희망함

마. 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 주요 논의 사항

○ **한-ASEAN FTA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특히, 주요 쟁점사항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과 발전소 건립**에 건설경험이 풍부한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배려를 당부함

- 특히,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전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도 요청함

○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결과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도입 인원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가급적 폭넓고 공정한 기회를 여러 나라에게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이해시킴

○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에너지기술, IT분야에 대해 한국이 더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였음

바. 기타 경제협력 성과

○ **전자정부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여 페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에 대한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2006년부터 시작되는 브루나이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가운데 1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전자정부 사업에 한국의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함

○ 한-칠레 FTA로 칠레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등 양국간 FTA가 교역을 늘리고 실질적인 협력을 증가시켰다고 평가(對칠레)

○ 호주의 경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할 용의 있음을 밝힘(對호주)

III. 기타 주요행사의 결과 : 민간 부문의 측면

1. APEC 투자환경설명회 (APEC Investment Opportunities 2005)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 14~17일, 부산시청
○ 참석 :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부대표, 기업인, 학자, 국제기구 대표 등 800여명(해외투자자 300여명 포함)
○ 주최 : 산업자원부

□ 행사 개관

○ 투자환경설명회 및 투자상담회(11.16~17)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7개 회원국의 국별 투자환경 설명 및 1:1 투자 상담회 개최

□ 주요 성과

○ **약 5억 1000만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산자부, 부산시 등은 LCD, 자동차부품, 로봇 등 **12개 외국기업과 5.1억 달러 상당의 투자 MOU 체결**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국적)	경제적 효과
산자부	E-bay	전자상거래(미국)	5년간 1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부산시	New World TMT	관광업(홍콩)	1억달러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SKF	자동차부품업체(스웨덴)	5천만달러
KOTRA	Gudel	로봇모듈 생산업체(스위스)	6백만달러

주1) **e-Bay**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egional Management Center : RMC)를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산자부와 체결**

☞ **전자상거래 허브화, 한국모델을 표준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모델 아시아 전파 기대, 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가 기대됨**

주2) 퀄컴, Fedex 등도 향후 R&D센터, 물류센터 등의 추가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 **잠재 투자가 발굴**

- 21개 APEC 회원국을 비롯, **34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된 약 300여명의 해외투자가와 투자상담 실시(약 2.2억불 규모)**

- **회원국 44개 기업과 약 100여건의 투자상담** 진행되었으며, 협상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아 향후 추가적인 성과 기대

  * 특히, 약 70명의 일본 부품소재 투자사절단 방한(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분야)

○ **국내 기업들의 APEC 역내 진출 활성화 및 회원국 투자 환경 개선의 계기 마련**

- 17개 회원국의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삼성, LG, KS, 한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국내기업인이 타국 투자설명회에 참석, 수출 및 투자 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 모색의 기회

- 또한 투자가들이 **국별 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해 회원국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됨

○ **최초로 개성공단 투자환경을 세계무대에 소개**

- 특히, 해외투자가들은 **외국의 자본을 이용, 한국에 R&D 센터 설립을 통해 첨단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 **개성공단에는 노동집약적 부품조달 및 조립공장을 통해 저비용을 활용**하는 **'남북 연계 삼각투자'**에 관심을 표명

- 또한,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 신의주, 중국 동북 3성 등으로 이어지는 중심축 역할이 강조되었음

-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의 의미를 APEC 회원국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각국과 FTA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관련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기여하여 남북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 잠재적 효과를 달성함

【개성공단 조성 계획 및 투자액】

☞ 개성공단 조성 투자액(1단계 사업비 제외) : 향후 **6년간 3조 8645억원**
– 공단개발에만 1조 6000억원 투자, 나머지는 생활구역 등 배후시설조성에 투입
☞ 100만평 규모의 1단계 사업(2205억원)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2005~2008년 2단계(, 2008~2011년 3단계로 사업을 진행
☞ 규모 : 총 2000만평 조성(공장지역 800만평 포함)
☞ 평가 : 재원조달 마련 여부가 관건

자료 : 산업자원부 작성, APEC 준비기획단 배포

□ **향후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무역·투자 건에 대해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정**을 통해 지속 관리

- 이 밖에 역내 투자활성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APEC 역내 투자관련 논의 및 OECD, UNCTAD 등 국제기구와의 투자협력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APEC 회의 중 확보된 **유력투자가의 DB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잠재 투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 특히, 투자성사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합동으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 전개**

○ 아울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한국의 투자환경개선(규제완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TF 구성, 실태조사 등)

2.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AC)

□ **개요**

○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서 **APEC 역내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민간기업 의견반영**을 위해 설립된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서 1995년 일본 오사카 AP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에 설립

- APEC 회원국 민간기업인 대표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정상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민간 기업인의 의견을 정상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일시 및 장소 : 11.14~16, 부산 롯데호텔

○ 참석자 : APEC 위원 80여명(교체위원 포함)

□ **회의 결과**

○ **WTO DDA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리더쉽 발휘 요청

○ **FTA의 역외국 차별 효과와 통일된 규칙의 부재를 지적함**

- 자유무역협정(FTA)와 지역무역협정(RTA)이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됨

- 즉, RTAs/FTAs의 포맷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아 기업인의 피해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역외국을 차별하는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FTA마다 원산지규정이 달라 추가적인 무역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함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 제안**

- FTAAP 타당성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APEC 기구안에 만드는 방안 건의

○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달성을 위한 과감한 조치 요구

○ **후진국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안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은퇴한 CEO가 중소기업 자문을 해 주는 등 후진국 지원 프로그램 및 APEC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요구함

○ **아태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행 확대**를 건의함

* ABTC 가입국 :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7개국

【기타 건의사항】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부패 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 단기 투자성 자금에 대한 적절한 대처 APEC 역내 국가간 금융시스템 강화
☞ 조류독감과 자연재해 공동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지식재산권 관련 규칙 강화
☞ 대체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유
☞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등

3. CEO 서밋(CEO Summit)

□ 개요

○ 매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모여 역내는 물론 세계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최대규모의 기업인 포럼**

- 1996년 4월 당시 APEC 의장국인 필리핀이 APEC 각료회의와 동시에 개최되는 APEC Business Forum(ABF)의 구성을 제안,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회의 때부터 APEC CEO Summit으로 명칭 변경되었음

○ 주제 : "기업가 정신과 번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공적인 파트너쉽 구축"(**역대 최대인 10명의 회원국 정상이 연사로 참석**)

○ 구성 : 10개의 정상세션, 7개의 토론세션 등 총 17개세션

○ 참석자 : MS, AIG, Citigroup, 중국련통 CEO 등 75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 **국내외 기업인 CEO 393명이 서명한 반부패-윤리경영 선언문 채택**

- 부패가 경제 및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니고 경영을 하기로 다짐하고,

- 최근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노력(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전략과 정책 토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 표출

- "기업은 정부와 사랑에 빠지되 결혼은 하지 말라"(잭 마 알리바바닷컴 회장, 중국)

☞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지만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존해야 함

- 한국을 물류허브로 만들려면 탄탄한 인프라와 제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부규제를 없애야 함(DHL 프랭크 아펠회장)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가 사회통합과 시장확대를 저해하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 APEC 회의는 느슨한 형태의 Forum으로서 정치적 선언에 머무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여부는 미지수임**

- 단, APEC 회원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자간 무역자유화 선도에 기여**하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음

○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다자차원에서는 WTO DDA, 양자 차원에서는 FTA를 수단으로 하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부산 로드맵을 활용키로 함**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통상국가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건전성 및 한국제품의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 브랜드가치 상승**시키는 계기가 됨

□ 국제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 **WTO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제공**

- WTO DD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자유화의 중요한 계기 마련과 비농산물 분야에의 과감한 자유화 조치 시도가 주목됨

- 단, 농산물 협상에서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한 EU와 첨예한 의견차**로 DDA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 어려움

- 한국의 경우 비농산물 협상과 관련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될 경우, **국내 수산업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는 **공산품에서는 선진국 입장을 지지하며 농산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순** 노출

○ 무역투자자유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화 접근이 용이한 **무역투자원활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강화

- APEC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 후 WTO라는 다자차원의 자유화 협정에 반영하는 추세

- 특히 WTO D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명확한 규범 정립을 요구함**

○ **향후 FTA 규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구체화될 전망**(통일된 모델 개발 등)

- 단, FTA협정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자유화를 위한 **국내조치의 철폐 등도 보고르 목표에 포함**되었는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과제에 직면

-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규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전망

□ **한국 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 **선진통상국가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미·중·일 등 17개 회원국의 국별 투자환경 설명 및 1:1 상담회, APEC-OECD 투자세미나,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WAIPA)아태지역회의 등 국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역내 투자활성화를 주도하는 선진통상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국 통상정책의 西進**

- 미국, 일본보다 **중국, 러시아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달성**하는 성과

-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김치파동과 관련 무역구제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러시아와는 "한-러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러시아와는 명태쿼터와 관련 문제도 원만한 해결로 가닥을 잡는 등,

- **중국 및 러시아와 실질적인 통상협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 반면, **미국 및 일본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

- 즉, 미국과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스크린 쿼터, 쌀협상 문제 등에 대한 원론적인 견해만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일본과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 한-일 FTA 협상 교착상태의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여 **중국산 제품**

의 덤핑 위협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확대 및 제재 조치의 약화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

○ **FTA 규정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어 **향후 FTA 규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될 전망

○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의 타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과 관련지지 의사 확인

○ **5억 10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기회가 되었음

- 특히, 개성공단 투자환경을 소개하여 해외투자가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 하였는바,

- 이는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관련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끝>

【별첨】對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배경과 효과

□ 개요

○ 배경

- 2005. 11.1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무역투자협력확대 양해각서 체결 내용 중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포함

-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 중국산 제품이 각국으로부터 덤핑규제에 시달리자 이는 자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 →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자국을 MES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지난 7년동안 500여건의 반덤핑 피소를 당해 세계 1위 기록

☞ **시장경제지위** :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덤핑 판정시 국내 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여부 심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는 결과 초래

○ 현황

- 현재 중국에 대해 MES를 인정한 국가는 공산품 수입비중이 높아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거의 발동하지 않는 국가이거나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아세안 등)등임

* 인정 국가 : 아세안 10개국, 호주, 남아공, 그루지아, 러시아, 브라질, 칠레, 페루 등

-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는 각국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덤핑판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국이 판정할 사안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담당기관임

-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시장인 미국 및 EU로부터 인정받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은 (1)국유기업매각, (2)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행정간섭 축소, (3)변동환율제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

☞ EU의 경우,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1)지적재산권 보호 (2)보다 많은 시장자유화 조치 등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

□ 우리나라의 對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 의의

-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국 가운데 최초로 MES 지위 인정한 국가

- 2005년 말로 한-중 교역 1천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대중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

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

- 중국의 주요 교역국가 중 선도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실리를 찾겠다는 포석

-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사후 분쟁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 및 조율 시스템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입장 표명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시 제 3국산 제품가격 기준이 아닌,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덤핑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정부는 1999년부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해 반덤핑제도를 운영해 왔는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지난해 말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1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중 소다회, 페로실리콘망간 등 2건에 대해서는 비시장경제국가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10건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았던 품목 : 일회용라이터, 알카리망간건전지, 백시멘트, 백상지, 규산나트륨, 차황산소다, 염화콜린, 이산화티타늄 등

- 다만, 철강제품과 석유화학 업계가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중국 철강기업의 50% 정도가 국유기업이며 정부의 산업

정책에 의해 가격이나 생산물량, 수급 등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음)

○ 우리의 대응책

-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 양국간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APEC 2005' 기간동안 체결함으로써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라 혹시 확대될지 모를 중국산 덤핑수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함

☞ 중국산 덤핑수출이 의심된다고 여기는 국내업체가 무역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앞서 중국의 해당기업과 미리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양국 구제기관이 개입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 마련

- 정부는 업계로부터의 덤핑 제소에 앞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할 때에는 사전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방침